"철도노선 총 42개·645㎞ 확충 경기도·국민 삶 개선 대전환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발표

김동연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과제"
KTX, 능곡역~파주 문산까지 운행
SRT, 수서~삼성·의정부까지 연장
용인~이천 반도체선 신설 추가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예고하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이 단순히 노선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을 포함하고 있다. 총 연장 길이 645km에 4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KTX는 정차역인 고양 행신차량기지에서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하여 파주 문산까지 운행, SRT는 GTX-A 선로를 이용해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재개,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반도체선 신설, 반도체선을 서쪽으로 연장하여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신천신림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을 선정,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서부선 경기남부 연장 등 6개 노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하여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하고자 한다.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주민 생활권 내 철도를 확대하는 12개 노선을 선정하여 이동이 편안해진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하고자 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가 교통 문제이고 철도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고인의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서 교원 보호
교권보호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관할 교육감이 7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교원과 학생의 분리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등이 주요 사항이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다른 개선사안으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는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10~50명 내로 구성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보고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또한,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위탁 기관과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부산시, 맞춤형 농식품 정책에 122억 투입

산모·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친환경 농산물 구매액 80%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부산시는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22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 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01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 쇼핑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1인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80%(38만 4000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g씩 연 22~26회 공급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더 확대해 추진된다. 시비 투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 학교 학생 3만 3000여 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속 지원한다.

또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학과 협의를 마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목요장터를 비롯한 구·군 직거래 장터 4곳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전남 해남·완도에서 물량 유치 활동을 했으며,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법인, 공판장과 합동으로 산지개척단을 구성해 사과, 양파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맞춤형 농식품 정책 추진으로 임산부, 초등학생, 대학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서 지속 추진할 것이며, 부산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서울시 "사과·대파, 시중比 저렴하게 공급"

농수산식품公, 롯데마트 등과 협력

서울시는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 주요 마트와 슈퍼에서 사과와 대파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개사(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 롯데마트와 협력해 유통·판매 마진을 최소화한 사과 7.5t과 대파 17t을 공급한다. 사과는 3월 첫째 주 평균 소매가격보다 66% 싸게 공급하고 대파도 24%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 가운데 채소류인 대파와 과실류인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사과는 생육기 냉해와 우박 피해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30% 감소했고, 대파는 여름철 생육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13%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다. 사과는 서울 시내 롯데마트(14곳)에서 2.5kg 1박스당 9990원에, 대파는 롯데마트(14곳)와 롯데슈퍼(84곳)에서 1kg에 2950원에 판매한다.

행사 사진. /서울시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중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선정해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글로벌 공동연구 대학 6곳에 年 50억 지원

〈5년간〉

교육부 '지-램프 사업추진계획'
올해 6곳 추가… 총 14곳 지원

교육부가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대학 6곳을 새롭게 선정해 5년간 연평균 약 5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램프(LAMP)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구축하고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8개교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기존 '램프'였던 사업명을 '지-램프'로 변경하고, 기존 사업보다 사업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총 14개 대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선정 대학 가운데 4곳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 평가단은 사업단 구성·운영계획, 학내 연구소 관리 및 지원계획, 중점테마 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이현진 기자